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18, No. 108, pp.413-424
<https://doi.org/10.29212/mh.2018..108.12>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서 평]

억울한 죽음, 드러난 진실

임영태 지음, 『한국에서의 학살: 한국 현대사, 기억과의 투쟁』 (동일뉴스, 2018)

노영기*

1. 불편한 사실과 마주하기

한국 현대사에서 민간인 대량학살(genocide)은 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事實)이다. 민족분단과 동족상잔의 전쟁이 발생한 한국 현대사의 불행과 아픔이 응축된 과정이자 결과이다. 수많은 사건이 발생하고, 헤아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당연히 군인들의 희생이 많았으나 이외에도 수많은 비무장 민간인들이 영문도 모른 채 죽기도 했다. 민족분단이 제도로 이어져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폭발함으로써 억울한 희생들이 필연적으로 뒤따랐다.

그렇지만 한국 현대사에서 오랜 시간 민간인 대량학살은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 수십 년 동안 죽임을 당한 피해자들이나 유족들은 존재마저도 부정당하고, 그 한과 억울함을 어디에도 마음껏 호소하지

*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교수

못한 채 형극의 세월을 견뎌야 했다.¹⁾ 한국 현대사에서 민간인 학살은 ‘유령’과 같이 취급당하였다. 대부분의 학살 피해자들은 어떤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처벌보다는 죽음만으로도 죄가 되기도 했다. 최소한의 법적, 제도적 절차나 장치 그리고 남녀노소의 구분도 없이 죽임을 당하였다. 그 자체만으로도 억울한데 그 죽음을 왜곡하는 굴레까지 씌워졌다. 심지어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던 친척의 죽음으로 파생된 중국 고대의 형벌인 ‘연좌제’의 폐해도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유족들은 국가에 대한 충성을 증명해야만 했다.²⁾

한국 현대사에서 민간인 학살을 대면하는 방식은 모순적이며 이중적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발생한 수많은 민간인 대량학살-유대인 학살, 남경대학살 등등-에 대해서는 인류를 위협하는 반인륜적, 반인도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비판해왔다. 하지만, 이 사안이 한국 사회에 적용될 때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띠어 왔다. 한국 사회에서는 ‘학살’을 감추기에 급급하였다. 왜 이 같이 모순된 일들이 일어나고 가능하였을까?

어찌 보면 그 답은 의외로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은 그렇지 못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민간인 학살의 문제가 제기된 것은 1980년대를 거쳐 1990년대에 와서야 본격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전까지는 어렵풋하게 사실을 알고 있으나 그 누구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내기가 어려웠다. 학문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민간인 학살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금기’의 영역을 깨뜨리는 용기가 필요하였다. 그 피해자들은 각계에서 수도 없이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이것에 대한 국가나 한국 사회의 대답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나오기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전혀 해결될 기미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 서중석, 『조봉암과 1950년대』 하, 역사비평사, 1999; 김동춘, 『전쟁과 사회 - 우리에게 한국전쟁은 무엇인가』, 돌베개, 2000.

2) 대표적으로 제주 4·3사건의 피해자들이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다.

몇 차례의 기회가 있었지만³⁾ 그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밝혀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되레 사실이 뒤바뀌는 어처구니없는 현상도 멈춰지지 않았다. 아울러서 국가권력이 주도하는 ‘국가폭력’인 까닭에 쉽게 접근도 못하고, 그렇기에 그 진상을 규명하기가 더디고 힘들었다. 『한국에서의 학살』은 최근까지 계속되어온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집약한 성과이다. 이제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 하고 있는지 따라가 보겠다.

2. 이 책은 무엇을 이야기 하나.

이 책의 머리말 부제로서 저자는 “역사는 망각과의 투쟁이다”라고 선언한다. 어찌 보면, 한국 현대사에서의 민간인 학살은 저자의 단언에 꼭 들어맞는 사안이다. 이로부터 시작된 저자의 탐색은 ‘과거사 청산’의 한 갈래로서 시도되고 있다. 저자는 ‘과거사 청산’을 “과거의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은폐되고 왜곡된 부분의 진실을 밝히고, 이를 통해 과거의 잘못을 확인하고 사회적으로 기억하며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는 일”로 규정한다. 굳이 저자의 표현이 아닐지라도 한국만이 아닌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불편하지만 적절한 표현이다. 저자도 프롤로그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하여 총 17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전체 내용은 2005년에 설립되어 2010년에 마무리된 ‘진실과화

3) 1960년 4·19혁명이 발발한 직후 전국 각지에서 6·25전쟁 전후한 시기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각계에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제4대 국회(민의원)에서는 ‘양민학살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국회의 특위는 전남, 경북, 제주도 등의 일부 지역에 한정하여 제한된 조사를 마친 뒤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강수, 「1960년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근현대사연구』 45, 한국근현대사연구회, 2008.

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위’로 줄임)’의 조사활동에 따른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은 엄밀하게 학술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다. 그럼에도 이 책은 ‘민간인 학살’이라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불편한 주제를 비껴가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다음은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들이며, 괄호 안의 내용은 저자가 첨가한 부분이다.

- 프롤로그(한국 현대사와 과거사 청산 문제)
- 1946년 10월 항쟁(한국현대사, 비극의 출발점)
- 여순사건(보복의 악순환이 막을 올린다)
- 제주4·3사건(유채꽃 제주도는 왜 ‘피의 바다’가 되었을까?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한 투쟁)
- 국민보도연맹사건(국가권력의 조직적인 학살행위, 보도연맹원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 형무소 재소자 학살사건(대구, 여순, 제주, 그리고 형무소 학살)
- 부역혐의 학살사건(도망간 정부가 피난하지 못한 국민을 심판하다.)
- 후방지역 민간인 학살(11사단의 견벽청야와 함평 민간인 학살, 거창·함양·산청 사건과 호남지역 학살)
- 국민방위군사건(1951년초 한국 겨울의 연옥도)
- 좌익에 의한 민간인 학살사건(좌우갈등과 투쟁의 폭력화, 북한의 남한 점령과 인민 학살)
- 미군에 의한 학살사건(노근리와 공중폭격, 남한에서의 미군 학살, 미 군기의 북한 초토화작전과 민간인 학살)
- 에필로그(‘역사의 심판’을 기대하며)

위의 목차와 같이 이 책은 총 16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는데, 중간 중간에 장을 두 개나 세 개로 구성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를 포함하면 본문만 581쪽이고, 미주를 포함하면 623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각각의 장에서 다루는 사건마다의

무게감과 물리적으로 넘겨야 할 분량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책이다. 그나마 학술서이기보다는 대중서인 까닭에 상대적으로 읽기는 편하다.

사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사안들은 각 장별로 단행본이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사건들이며, 실제로도 그동안 개별 주제들과 관련된 연구 성과물이 축적되었다.⁴⁾ 그럼에도 저자는 다시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에서 다루는 시기도 미군정기인 1946년 10월 1일부터 시작되어 6·25전쟁기에 이르며 다루는 지역도 한반도 전체를 포괄한다. 또 좌우익을 가리지 않으며 미군까지 포함된 학살을 포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어렴풋하게나마 짐작해본다. 그동안 한국 현대사의 민간인 학살을 다룬 수많은 책들이 대부분 개별 사안에 집중한 때문에 이 책에서처럼 ‘백과사전’식의 책이 드물다. 자연 분량도 많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책은 한국 현대사의 과거사에서 가장 크고 중대한 문제인 민간인 학살을 다루고 있다.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 현대사에서 ‘과거사 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자마자 중단되거나⁵⁾ 아예 시도되지 못한 사안들이 차고도 넘칠 정도이다. 친일,

4) 이 책의 목차에 맞춰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정해구, 『10월항쟁연구』, 열음사, 1999; 김상숙, 『10월항쟁연구』, 2017; 제민일보, 『4·3은 말한다』 1~5, 전예원, 1994~1998; 양정심, 『제주4·3항쟁연구』, 선인, 2008; 허호준, 『그리스와 제주, 비극의 역사와 그 후: 그리스 내전과 제주4·3 그리고 미국』, 선인, 2014;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선인, 2009; 주철희, 『동포의 학살을 거부한다』, 흐름, 2017; 김기진, 『끝나지 않은 전쟁, 국민보도연맹』, 역사비평사, 2002; 김동춘, 『전쟁과 사회』, 돌베개, 2006; 정구도, 『노근리 사건의 진상과 교훈』, 두남, 2002; 최상훈, 찰스 헨리, 마사 멘도자 공저, 남원준 역, 『노근리의 다리』, 잉걸, 2003; 김동춘,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한국전쟁과 학살, 그 진실을 찾아서』, 사계절, 2013; 한성훈, 『가면권력: 한국전쟁과 학살』, 후마니타스, 2014.

5) 그 대표적인 사례가 친일과 청산을 시도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이다.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구임에도 그 활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1949년 6월 6일 경찰의 습격을 받아 ‘친일과 청산’은 끝내지 못한 과제로 남겨졌다. 이강수, 『반민특위 연구』, 나남, 2003; 허중, 『반민특위의 조직과 활동: 친일과 청산, 그 좌절의 역사』, 선인, 2003; 정운현 편, 『풀어서 본 반민특위 재판기록』, 선인, 2009.

학살, 국가권력의 부당한 인권 침해 등등이 대표적인 과거사의 사례들이다. 그로 인해 역사, 한국 현대사가 뒤틀렸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것은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와 직결된 문제들이기도 하다. 머리말에서 저자는 조지오웰의 『1984년』에 나온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말을 인용하고 있다. ‘과거사 청산’이 중요한 이유이다. 이 책은 한국 현대사의 과거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인 ‘학살’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민족분단과 6·25전쟁이 한국 현대사를 왜곡시켰으며, 그로 인해 많은 과거사가 쌓여왔다고 주장한다. 민간인 학살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미군정기로부터 시작된 ‘학살’의 문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후한 시기에도 이어지고, 6·25전쟁기에 이르러 폭발적인 양상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이 같은 학살의 과정, 학살의 연쇄고리가 어떻게 형성되어 펼쳐졌는가를 살펴보고 있다. 그렇기에 이 책의 시작은 1946년 10월 1일 대구에서 시작된 학살로부터 ‘비극의 출발점’을 찾고 있다. 다양한 배경 때문에 발생한 1946년 10월항쟁의 학살은 다양한 피해를 낳았다. 저자는 10월항쟁이 “최초의 동족상잔이자 좌우의 유혈충돌”이며 대규모 학살로 이어지는 “비극의 출발점”으로 “한국 현대사에서 비극의 첫 총성을 울린 사건”으로 평가한다. 전체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비극의 출발점이 된 계기였다는 점은 충분히 의미 있는 지적이다.

여순사건에서는 그 인적, 사회적, 국가적 배경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반공국가 대한민국과 함께 이른바 ‘빨갱이’가 탄생하는 순간”이라며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 냉전의 산물임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의 지적처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민족이 분단되고 한반도가 냉전의 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그 의도가 어떠한지 민족분단과 냉전이 학살에 직간접으로 영향

을 미쳤고 그 결과는 참혹하였다. 제주도4·3사건은 이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상을 밝히는 과정 또한 험난하였다. 이 사건은 진실위의 조사가 있기 전에 이미 위원회(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가 구성되고 국가가 앞장서서 진상을 규명하고 인정한 사례이다.⁶⁾ 그러나 국가의 진상규명 및 사과가 이루어지는 과정은 제주도민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저자의 표현처럼 “역사의 진실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다. 또한 진상규명 이후에도 ‘희생자위령사업, 유족복지사업, 문화학술사업, 평화교육사업, 추가 진상조사사업, 평화재단 설립’ 등이 후속사업을 전개되고 있다. 아직 미흡하지만 계속되는 유해발굴사업을 비롯한 후속사업이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4·3사건의 진상규명이 되고 국가의 사과가 있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진상규명은 출발일 뿐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새로운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보도연맹사건은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진실위의 조사가 있기 전부터 이 사건은 많은 관심이 불러일으켰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이 조직은 전향한 사람들(국민보도연맹원)을 대상으로 만든 반관반민의 조직이었다. 하지만, 6·25전쟁이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보도연맹원들은 학살의 직접 대상이 되었다.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있으나 그 뒤 북한이 점령한 뒤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우익 인사들을 죽이는 보복학살, 뒤이은 우익 인사들의 유족들이 자행한 보복학살이 이어졌다.

국민보도연맹 학살사건이 학살의 연쇄고리로 작용한 것이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 사건을 ‘국가폭력’과 ‘정치적 집단학살’, ‘예방학살’ 등으로 개념화한 저자의 규정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 저자도

6)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지적하듯이, 이 사건은 국민보도연맹이라는 조직에 한정될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미군정기를 거쳐 정부수립 이후 발생한 정치적 사건과 연관되어 조직되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이며, 예방적, 그리고 다른 사건들과 연관된 특징은 형무소 재소자 학살사건도 마찬가지이다. 부역 혐의학살사건은 한강 인도교 폭파와 이승만 대통령의 거짓 방송 때문에 피난가지 못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학살한 사건이다. 여기에 지역 별 사정에 따라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하였다.

후방지역 민간인 학살은 주로 11사단(사단장; 최덕신)이 자행한 사건이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⁷⁾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고 관련자들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처벌되었다. 하지만, 이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처벌받은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석방되어 원래의 계급에 복직하였다. 즉 가해자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면죄부를 부여받았다. 오히려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앞장서서 방해한 김종원과 같은 인물은 뒤에 경찰 총수(치안국장)의 직위에게까지 올랐고, 치안국장에 오른 그가 처음 저지른 일이 ‘장면 부통령 암살’ 시도였다. 이렇듯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은 학살의 책임을 묻고 이후 학살을 예방할 수 있었던 기회였지만, 이승만정권은 이 사건을 덮고 은폐하기에 급급하였다. 결과적으로 이후로도 후방 지역에서 민간인 학살은 멈춰지지 않았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다른 학살사건들과는 그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저자는 당의 시인 조송의 “장수 한 사람이 공을 세우려면 만백성이 백골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며 국민방위군사건을 비판하고 있다. 널리 알려졌다고 국민방위군사건은 중공군의 남하 이후 급조된 국민방위군 대원들(50만명)을 후방으로 후송한다는 계획으로부터 발단하였다. 정부 수립 직후 통합된 청년단체(대한청년단)가 청년방위

7) 원래 ‘거창양민학살사건’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는 민간인 학살사건으로 표기한다. ‘양민(良民)’이라 했을 때는 ‘비양민(非良民)’은 죽여도 된다는 무서운 논리가 들어 있기 때문이다.

대로 이어졌고, 중공군 개입 이후 전세가 급변함에 따라 국민방위군으로 급조되었다. 급조되기는 했지만 관련 법이 국회를 통과되고 예산이 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부들이 공금을 횡령하며, 정치권의 정치자금으로도 흘러들어갔다. 그 결과는 참혹하였다. 국민방위군으로 소집된 사람들에게 방한복과 식사가 제공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낙오하고 굶주리며 질병에 걸려 죽어갔다. 쉽게 말하면 ‘방위성금’을 횡령함으로써 국방의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국민방위군을 ‘죽음의 대열’, ‘해골의 행렬’, ‘거지 중의 상거지’라고 불렀다는 저자의 서술처럼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다.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와 군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승만정권은 사건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으나, 결과적으로 국방부장관의 교체(신성모에서 이기붕)를 비롯한 정계의 판도를 바꾸는 사건이 되었다.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장관 이기붕이 주요 정치인으로 부각할 수 있었다. 사건은 간부들이 처벌받는 것에서 마무리 되었다.

이 책에서 좌익의 민간인 학살을 배경, 실체, 그리고 학살의 책임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점령 기간에 학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인천상륙작전 이후 북한의 퇴각하며 우익 인사들에 대한 조직적인 학살이 자행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과거사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 즉 우익에 의해서든 좌익에 의해서든 민간인 학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결코 대한민국의 명예를 더럽히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며 민간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미군에 의한 학살사건으로 저자는 노근리사건 외에도 이리역오폭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들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미군의 폭격이 가지는 구조적인 면에 주목한다. 대표적으로 용단폭격과 같은 폭격이 필연적으로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 북한에 대한 미군의 폭격이 수많은 민간인들의 피해를 가져왔다고 서술한다.

3. 몇 가지 남는 이야기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이 책은 학술서 보다는 대중서이다. 진실위 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저자의 경력과 진실위 조사에 근거한 성과에 기초하고 있다. 책의 대부분을 진실위 보고서와 학계의 성과를 비교적 잘 반영하여 종합하였다. 부분적으로 새로운 자료가 보이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진실위 보고서에 기초하고 학계의 성과를 보충하였다. 이 점은 이 책의 장점이자 단점이다. 새롭게 발굴한 자료에 근거한 연구 성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동안 개별 사안에 집중한 연구를 종합한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의가 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자의 서술이 지나치게 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국 현대사에서의 민간인 학살에 이르는 배경과 그 과정을 이해하려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어떤 장에서는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내용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 그로 인해 책이 두꺼워지며 개별 사안에서 정작 다뤄야 할 핵심이 소략한 면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약간의 불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서술로 인해 이 책의 긴장감이 떨어지고 있다.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과 학살을 저질렀던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자는 주장이다. 먼저,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활동은 지금에서도 필요한 작업이다. 한국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초가 되어야 할 작업이며, 한국 현대사에서의 민간인 학살은 상당수가 국가가 주도하거나 또는 그 책임이 있는 ‘국가폭력’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오히려 ‘국가폭력’의 전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어찌면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이전에도 몇 차례 그렇게 한 적이 있다. 4·3사건과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노근리 학살사건 등이 대표적인 선례이다. 비록 완결되지 못했지만 진

실위도 마찬가지로이다.

여기서 고려될 점은 민간인 학살사건은 장소도 광범위하며 다양한 성격의 사건들이 혼재되어 있다. 또 이전의 진실위 활동이 한계도 있었으나 성과도 있었다.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로운 과거사 청산기구를 만들지, 아니면 각각의 사건별로 조사하는 기구를 만들지 추후 치열한 고민과 토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 같은 불행한 사건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후속사업이 필요하다. 제주4·3사건과 같이 위령사업과 추가 진상규명, 그리고 평화재단 설립 및 평화교육 등등이다. 어찌면 후속사업의 계획 및 진행은 진상규명 만큼이나 중요한 일이다. 저자는 과거사 재단을 제안하고 있으나 추상적일 뿐 구체적인 대안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아직 진상규명이 제대로 완결되지 못한 한계를 반영한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추후 과거사 청산에서는 진상규명 못지않게 후속사업, 개인적으로는 평화교육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실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불행한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학살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제안은 추후 고민해야 할 문제로 남겨두며, 오랜 기간 민간인 학살 문제를 고민했을 저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것으로 미비한 글을 마친다.

